

2.

대북정책

1 북한 체제의 특성



[강의 보기]

1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인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은 일당독재체제이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된 신정 왕조체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헌법은 최고법으로 존재하고 국회가 정한 법률, 대통령령, 조례 순으로 위상이 낮아진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이 최고 권위를 지니고 당의 유일적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조선노동당 당규약, 북한 헌법, 법률 순으로 위상이 낮아진다.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시 말씀'이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도 북한에 어떤 법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2 북한에도 선거가 있을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도 불린다.

북한도 법으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 투표를 실시한다고 하나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투표소에 걸린 포스터에도 ‘모두 다 찬성투표하자’라고 되어 있다.

3 평등을 강조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북한

북한은 모든 인민을 3계층(핵심계층·동요계층·적대계층) 51개 부류로 분리하였다. 핵심계층은 항일투쟁 참가자 및 그 가족, 6.25전쟁 참가자 및 전사자 가족, 빈농·고농·노동자 출신 및 가족, 영예군인, 접견자, 근로자, 지도자와 체제에 충성을 다한 사회적 표본이 되는 영웅 등이 해당된다. 동요계층은 일반노동자·기술자·농민·사무원 및 그 가족들로 구성된다. 적대계층은 지주·부농·예속자 본가의 후손, 친일파·치안대 가입자와 그 가족, 종파분자, 군입대 기피자, 정치범출소자, 월남자 가족 등이 포함된다.

핵심계층	항일 투쟁 참가자 및 가족, 6.25전쟁 참가자 및 가족, 영예군인, 체제에 충성을 다한 표본이 되는 영웅 등
동요계층	일반 노동자, 기술자, 농민, 사무원 및 가족 등
적대계층	지주, 부농, 예속자 본가의 후손, 친일파 및 가족, 정치범 출소자 등

북한이 사회계층을 구분해 놓은 것은 반당·반혁명 색채를 가진 인물을 제거·격리시키고 유일독재 유지를 위한 사회통제를 강행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의 사회계층 구분은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고착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 출신성분에 따라 대학진학·교육혜택·직업배치 및 승진이 결정되어 이를 통한 소득 격차의 발생, 생활수준에서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평등을 주장하는 북한 사회주의 성격에 위배된다.

4 1990년대 이후 변화하는 북한

동구권과 소련이 무너지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란 대량 아사를 겪으면서 북한 주민도 스스로 장마당을 만들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금은 전국에 400곳이 넘는 장마당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국경을 통해 밀수가 이뤄지면서 한국의 노래, 영화, 드라마가 유입됐고,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9월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 북한의 핵전략

1 대북정책의 핵심: 북핵 문제

북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1990년대 초부터 역대 정부가 해결에 매달려 왔지만 오히려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볼 때 핵 국가가 출현할 때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조가 흔들렸다.

2차 대전 이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은 애치슨 라인을 그어 방어선을 한반도 아래로 내렸다. 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미군이 도와주러 오지 않을 것으로 오판하여 6.25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이 1964년 첫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고 1967년도에는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자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은 1969년에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여 대만에서 손을 떼게 된다.

김일성은 6.25 전쟁 때 맥아더가 북중 국경과 국내에 핵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포를 겪었고 이후 중국의 핵 보유 후 미국의 반응을 보고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판단 하에 1960년대 중반부터 핵 개발을 시작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를 보고 체제위협을 느껴 핵을 본격 개발하기 시작했다. 김정일 통치 시기 2006년 첫 핵실험을 했고, 2009년에 2차 실험을 했다.金正은이 2012년 본격 통치를 시작하고 나서 4차례나 핵실험을 하는 등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과 당규약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했으며 2017년 9월 6차 핵실험 후 그해 11월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 당 창건 기념 열병식과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단거리 전술미사일과 같은 무기에 소형핵탄두를 탑재하여 남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유엔은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핵 비확산체제를 위협하자 안보리이사회 결의로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 첫 대북제재 결의를 했고, 2017년 12월까지 총 10차례 대북제재를 결의하였다. 흔히 유엔제재로 북한 주민이 아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유엔제재는 핵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고, 인도적 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유엔 대북제재를 빈틈없이 이행하여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

3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북핵 문제는 역대 정권의 최우선 대북정책 과제이다. 문재인 정부도 북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펼쳤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과거 정권의 대북정책과의 차이점은 과거 정책이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분리해서 접근했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연동해 놓았다는 것이다. 양자의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며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성공의 판가름에는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통해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사국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 의도대로 평화가 정착되어가면 남북간 교류협력도 강화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같은 남북 인도적 문제,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같은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4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 정책 평가

1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매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북한인권법 사장화

2016년 11년 만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도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사장되었다 할 수 있다. 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북한인권대사도 4년째 공석이다.

3 2019년 북한 어부 복송사건

2019년 11월에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고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 북한에 보냈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손을 뒤로 묶어서 판문점에서 강제 복송했다.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 난민을 복송시키지 않도록 요청할 때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이들이 범죄자이고 경제적 난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복송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어부가 범죄자라는 이유로 복송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난민 복송에 대해 항의할 명분이 약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남한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구실삼아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항의를 하고 폭파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대북전단금지법을 제정하여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막는 조치를 하였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전단살포를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와 동맹국인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5 국민의힘 대북정책 및 기조

국민의힘 <10대 약속> 중 10번째 약속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안보'

1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상호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도 불용하고,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킨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호혜적인 대화와 안정적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 북한이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 북한의 비핵화와 외교지평의 확대

한반도 및 동북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고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능력 있고 믿음직한 중추 국가로 재도약한다.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상호 존중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킨다. 보편적 가치와 국제규범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 구축을 선도해 나가며 ‘인간 안보’ 및 기후변화·사이버 등 새로운 위협 대처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 외교를 전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경제외교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며, 이에 맞추어 800만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3 힘을 통한 평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우선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약화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저출산과 군사기술혁명 및 안보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해 첨단 자주 국방역량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보태세를 강화한다.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고 군복무에 대한 명예와 보상, 그리고 안보희생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6 올바른 통일 정책

1 통일의 주역이 될 북한 밀레니얼 세대

통일은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가 만들어 낼 것이다. 북한의 1세대와 2세대는 6.25 전쟁을 겪거나 북한 사회주의 시스템이 그나마 작동할 때 인생의 전반기를 보낸 세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밀레니얼 세대는 자본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노래를 거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이 장차 북한의 중추세력인 50대 이상이 될 20~30년 후 통일의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2 올바른 통일 정책이란?

통일은 우리 헌법에 따른 평화적이고 자유민주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들에게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하고 특히 외부 세계 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통일 정책이다.

연습문제

※ 자세한 풀이과정은 국민의힘 「공직자 역량강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올해는 남북한 분단 77주년이다. 통일의 대상인 북한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대북·통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음 중 북한체제 특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

가 :	북한은 수령독재체제야. 조선노동당 당 규약, 헌법, 일반법보다 김정은 총비서의 구두지시나 방침이 우선하고 있어.
나 :	북한은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되었어. 모든 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인 3개 계층으로 나누고 다시 51개 부류로 분류하고 있어 출신성분이 나쁘면 교육, 직업, 의료 등 모든 혜택과 기회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
다 :	북한에도 한국의 노래나 영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한때는 단속을 통해 막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허용하고 있어
라 :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을 거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마당을 만들어서 지금은 400곳이 넘는 장마당이 북한 전역에 걸쳐 형성되었어
마 :	북한은 선거제도가 있어서 주민들 누구나 뽑고 싶은 후보에게 자유롭게 투표하고 있어

① 가, 다 ② 나, 마 ③ 나, 라 ④ 다, 마

2. 다음 중 북한의 핵 전략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사람은? ()

가 :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을 만들었어. 한국을 겨냥한 선제타격은 언급한 적이 없어
나 :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핵을 개발했어. 북한은 지금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ICBM 미사일 개발을 통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어.
다 :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없이 해왔다고 밝혔어. 심지어 2018년 남북정상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기간도 포함해서 말야
라 :	북핵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발전을 억제할 뿐이지 인도적 지원까지 막고 있지는 않아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3.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관계-미북관계 선순환을 통해 남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며 신뢰를 구축해 나간다.
- ②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③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구축한다.
- ④ 북한 정권이 꺼려하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보다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한다.

4. 다음 중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집행 사실과 가장 먼 내용은? ()

가 :	2019년 11월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헌법상 우리 국민인 이들을 안대를 씌워 판문점에서 강제 복송하였어
나 :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유엔 총회에 상정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다 :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고 북한인권대사가 임명되어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라 :	정부와 여당은 남한 단체가 휴전선 일대에서 살포하던 대북전단을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어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5. 국민의힘 <10대 약속>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철학을 담고 있다. 아래의 <10대 약속>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대북정책을 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알맞게 연결 지은 것은? ()

(A)

<더 크고 더 좋은 나라 통일 대한민국>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행복을 추구하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을 지향한다. 상호존중과 평화 공존의 정상적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한다. ...(중략)... 북한이 탈 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며 인도적 협력과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가 :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남한에 들어왔던 미국 전술핵과 북한의 핵을 모두 제거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어
나 :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만 실효적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입국해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어.

(B)

<힘을 통한 평화>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해 '힘을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장한다. 우선 실질적인 북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한다. 약화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다 :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의 탱크나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해 막아야 해
라 :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만이 아닌 야외기동 훈련도 필요해

① (A) - 가, (B) - 다 ② (A) - 가, (B) - 라

③ (A) - 나, (B) - 다 ④ (A) - 나, (B) - 라

6. 우리의 올바른 통일 정책에 대해 옳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

가 :	통일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해.
나 :	북한의 핵은 통일이 되면 어차피 통일한국의 자산이 될 것이라서 완전 폐기까지는 안 가도록 해야해
다 :	북한인권 문제를 통일 정책의 우선 추진과제로 상정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해
라 :	통일 정책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춰야 해. 북한 주민들도 인간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해. 특히 외부정보를 접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해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정답]

1. ④ 2. ① 3. ④ 4. ③ 5. ④ 6. ②